治山治水의 당사자는 국가와 건설산업

- 자연이자연을관리하도록방치함은무책임, 피해최소화대책강구를-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전선이 증폭되어 몰고 온 폭우가 북한 지역을 포함 강원도,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및 전라도 등전국에걸쳐많은피해를야기하였다. 매년반복되는자연재해에대해또다시논란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천재(天災)와 인재(人災)에 대한 공방과 ‘ 사후 처리 ’가 아닌 ‘ 사전 예방 ’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그것이다.

홍수로인한수위조절용댐건설을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자연의순리를거스른물길이환경파괴는물론오히려홍수피해를증대시킬뿐이라는주장이있는가하면, 과거10년 동안홍수로인한유량을조정할수있는변변한댐하나건설하지못한대가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한 지역의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난에 대해 하늘만 원망하며더욱깊은수렁에빠져들고있다.

치산의 치수 책임

땅과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治山治水)는옛날부터국가지도자덕목의제1순위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현재는정부가중심이

되기보다피해지역주민들과환경단체, 그리고몇몇학자들과정치인들만의논란거리로전락되었다. 피해가발생하면으레국정책임자와 정치인들이 피해 지역을 방문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겠다는 말로 피해 주민들을 달래는연례행사가재현되고 있다. 국가에서채택한것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도이다. 사후처리중심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근본적인해답은아니다. 치산치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해결할수있는당사자는지역주민도환경단체도 아닌국가와 건설산업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정부와건설산업의 모습은 목소리 높은 환경 단체들로부터 비껴서 있는실정이다.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멀리 있다는 자괴감까지 든다. 어느학자는손실에대한책임을물어야수해로인한재난을 막을수있다고까지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비용지불에대한언급은하지않고 있다.

자연 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래지구환경예측보고서들을보면과거및현재의사고나 대응방식으로는한계에부딪히게될것으로보인다. 자연을자연그대로 보전한다고 해서 자연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라는결론이다. 인간이지구개발과자원을활용한대가에대한보복이시작된게아닐까하는정도로우울한전망일색이다.

세계 최대 정보 기관인 미중앙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센터(NIC)가 2004년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남 · 북극 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지구의 70%를차지하고있는바다의해류를변화시키게될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류의급격한변화는 필연적으로기후변화를야기하게 된다. 이러한기후변화는태풍의강도는물론국지적인호우성폭우를동반하게된다. 최근미국 남서부 지역을 강타한태풍 카트리나, 인도네시아를 휩쓴 3차례의 쓰나미,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태풍에위니아와 폭우, 올 2월 전북 지역을 강타한 폭설, 태풍 루사 등은기후의이상변동이아닌일상화된습관성변화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NIC 보고서의결론은미래기후변화에대해혁신적인대응전략이마련되지않으면인류가재앙에부딪힌다는것이다.

미국공학한림원(NAE)도 2004년에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비록 미래 변화 시나리오 4가지 중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미래과학기술은자연재해를다스릴수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론을경고했다. NAE는구체적인예시로지구촌의평균온도가과거100년동안섭씨1도가량상승했다는점을들었다. 이로인해 과거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20cm 정도높아졌다고한다.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유럽연합에서 연구한 결과(2006년 2월)에 의하면 유럽연합 국가에 존재하고 있었던 인공 시설물(도로나 교량 및 건물 등)의 50%가 지난 100년 동안 파괴될 정도로기후변화가심각해졌다고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필요

선진국들의 이러한 미래 기후 변화 전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자연 재해로부터피해를원천봉쇄할수있는방안은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자산이입을수있는피해정도를최소화시킬 있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이런전략을실천하기 위해서는비용지불에대한국가와국민들의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천재와 인재 사이의 논란만을 연장하거나 혹은 댐 건설이나 자연보전과같은양자택일방식으로는미래변화에대응할수없다. 결국건설산업이 자연재해로부터국가와국민들을보호하기 위해서는비용이들더라도피해를저감시키는방향으로가야한다.

자연이 자연을 관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무책임하다. 피해를줄일수있는방향으로 가야 한다. 댐 건설에 대한 환경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폭우를 동반한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춘천댐, 화천댐, 소양강댐 등이 크든 적든 간에 급격하게 밀려드는 유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가 우리의 2배가 넘는 100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남한의 개발이 북한보다 훨씬광범위하게이뤄졌음에도불구하고인명피해가적은이유는자연재해를다스릴수있는 홍수조절댐과수로변경이그나마건설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해 댐 건설이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는뜻이다.

그렇다고 댐을 마구잡이로 건설하자는 것이나 혹은 건설 시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래의환경 변화 예측을근거로하면자연을자연그대로방치하자는주장에는동의할수없다는것이다. 지역이나마을 차원이아닌국가의 국토관리 차원에서미래에닥칠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국가차원의전략 수립을당장에시작하자는것이다.

그리고 수해를 입은 가구들을 그 자리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장기 전략을 가지고 분산된마을중상습피해지역은마을을집적화하는방법도 생각해볼만한대안이다.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여 분산된 가구들을 집적해산촌의새로운 집적마을을 건설하고, 상습피해지역에남아있는시설물이나쓰레기를 제거한 후 자연으로 복원시키는 전략이다. 새로운 집적 마을에 거주 · 교육 · 문화 · 의료 · 복지시설등이동시에들어서

자연이자연을관리하도록내버려두는것은무책임하다. 자연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댐 건설이 자연 재해로 인한 재난을 100% 막을 수는없겠지만 피해를줄이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은충분히 할수있다.

게만들어사람들이찾아드는복합생활공간으로변모시키는전략이기도하다.

집적 마을 사이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일터를 연결하는 생계형 작업 도로를 복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못해사는동네가아닌누구나찾고 싶고 살고싶은산촌의마을을만들자는캠페인이다. 다만, 이런전략이실행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에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 이주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다. 복구한지 1년이나2년도안돼또다시피해를보는것보다는훨씬안전하고경제적일것이다.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것도 최소 비용을 들여 원상태로 복원시키는 게 현재까지 나타난정부의대책이다. 더욱이신규로도로를 건설하거나노폭확장을하는경우자연재해예방을해야한다면서편성되는예산은 과거 방식의 답습이다. 있는그대로의 복원이나 했던 방식대로의 건설이나 성능 개선은절대 해답이아니다. 비용이추가로 들더라도 재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여기에는설계기준의변경이따라야한다. 비용은그대로이면서요구수준만 높인다는 것은 목소리만 높이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인식 수준이다.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자연 보호보다 앞서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 지불 없는 혜택은 있을 수 없기때문이다.

자연의 방치가 정답은 아니다

자연 재해를 다스리는 새로운 개념과 성공사례로꼽히고있는중국북경지역에건설된용강협댐을벤치마킹해보자. 예로부터 북경은물 부족도시이다. 그러면서도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습화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그런데홍수조절과북경시민들이사용할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1980년도에 북경 도심에서85km 떨어진용강협에댐을건설했다고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경을 관광하는경우이용강협댐을하나의 관광상품으로만인식하고있지만그댐이 홍수조절과 물부족현상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건설되었다고한다면어떤생각들을하게될까?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지만 또한자연을그대로방치하는것역시정답은 못 된다. 최소한 자연이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건설산업에서 마련해야 할책임이있다.

홍수 피해를 가장하여 댐 건설 주장이나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주장을하는단체나개인들은피해지역의 주민이나 혹은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으면관두지 식으로일관하는과거와같은대처방식은치산치수에책임을가진건설산업이걸어가야할길은아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없다. 그러나, 국가는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 그리고 국가 자산을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책을 수립할 책임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떤선택을하더라도모든단체나개인들의목소리는 다르게나타난다. 더욱이 해답을알고있는건설산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건설산업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무엇이 국가와 국민들을위한것인지를제시해야한다.

문제는 기후 변화가 가져올 자연 재해가 싫든좋든간에더빈번해지고 또강해진다는사실이다. 우리역시옛날로돌아갈수는 없다. 그렇다면해답은간단하다. 이문제를 덮어두기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연 재해로인한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정책과 전략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그책임은환경단체나개인들이아닌국가와건설산업의몫일수 밖에없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
bnlee@cerik.re.kr